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721
----------	-------

제출년월일 : 2025. 4. 2.

발 의 자 : 현옥순,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박은정, 한갑수,
유재수, 설호영, 선현우,
최찬규, 이진분, 황은화,
최진호, 이지화, 박은경,
김진숙, 송바우나 의원(17인)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사망 사고, 청소년 무면허 운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규정만으로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 관리와 편리한 이용 도모를 위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건의함.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난 현재 이용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교통사고 및 사망 사고 증가, 청소년 불법 이용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강화된 안전 수칙 등을 마련하였지만,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고, 업무

연계성이 떨어져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제재의 한계가 있음.

- 이에 안산시의회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 관리와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2018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쓰러지면서 뇌출혈을 일으켰고, 사고 20일 뒤에 숨졌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한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도입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난 현재, 이용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급증에 따라 관련 사고의 증가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이용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도 8명에서 24명으로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중 무면허 사고는 34.6%(2,027건)로 이중 67.6%는 19세 이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안산시의 경우도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사고 가해자 중 청소년의 사고 비율이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원동기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등 강화된 안전 수칙이 마련되었으나, 관련 업무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나뉘어져 관리 및 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허술한 면허 인증, 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 무단 방치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제재의 한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나 권한이 없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안전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 관리와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산시민을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고,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라!

2025. 4. .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